

1. 쇠고기 협상 및 한-미 FTA 협상 동향과 전망

○ 한-미 쇠고기 협상 : ‘뺏조각이 검출된 쇠고기 박스만 반송, 나머지는 시판’으로 결론

- 3월 4일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즉, 미국은 협상에서 한국에 쌀 시장 개방 요구를 접는 대신, 그 대가로 농산물 분야에서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과 함께 현행 40%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받기 위해선 쇠고기 시장 개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특히 향후 미국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나 ‘뺏조각 제외’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둘 수 없으며 미국의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 없이 한-미 FTA 비준 불가”를 고집하며, 향후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한-미 FTA는 8차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한 3월중 막판 타결이 예상된다

- 2월의 7차 협상과 3월의 8차 협상을 거쳐 한-미 양국은 핵심 쟁점에 대한 빅딜을 시도하고,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한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5일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과 8차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핵심 쟁점은 민감품목 지정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에 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 이 속에서, 미국이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FTA 협상의 압박 카드로 제시함에 따라, 자동차·섬유·무역구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없이 한국 정부가 ‘막판 퍼주기’ 식으로 협상을 그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 한농연은 2월 및 3월에 자체 대응활동을 탄력성 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 한농연은 2월 12일 및 3월초로 예정된 한-미 FTA 대응활동을, 한농연 자체 차원에서 탄력성 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 우선 2월 7차 협상기간을 전후로 지역별 현수막·깃발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설 연휴 전날인 16일에는 농대위 차원의 떡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3월중에는 중앙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활동 전개

○ 한농연 및 농민단체는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 현행 조세제한특별법 상에는 올 6월말로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폐지되도록 규정되어, 일몰기한이 연장 되지 않을 경우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과 농어가소득 하락으로 농어가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 특히 교통수단이 아닌 핵심 농업 생산도구인 농기계에 대해서까지 교통 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농연 및 농민단체는 홍문표 의원 등 20인의 대표발의로,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위한 조세제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향후 한농연은 농민단체들과 발의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활동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3. 농협 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논의 동향

○ 정부의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시안)에 대하여

- 정부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월 1일까지 열린 지역순회 공청회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초점을 맞추고 10년 내지 12년의 시한을 정해 조직개편(신경분리)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경분리 추진 상황을 점검·진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내에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두고 반기별로 점검회의를 하고 2~3년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

-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형태로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핵심 내용은 신경분리를 5년 내 조기 분리하고 감독기관을 농림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겨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조직은 물론, 우리 농업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사업·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도외시한 채, 농협중앙회 자체 수익성 강화를 위한 신경분리를 선불리 추진할 경우,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은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일선조합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한농연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계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에서 물러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신경분리 논의는 농민조합원의 실익에 기여해야 하며, 농민조합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한농연은 강조하고 있다.

○ 한농연의 농협중앙회 개혁 요구사항

- 신경분리(조직개편) 시한을 7~8년까지로 앞당겨 실시할 것
-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농림부 산하에 둘 것
- 경제사업 강화를 위하여 정부도 추가자본금 출연에 나설 것
- 조합원·이감사·대의원·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할 것
- 향후 한농연은 3월중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이 위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